# 지자체들 지방소멸 위기 돌파 ‘유아숲’으로 양육환경 만든다

## 광주·전남 유아숲 체험원 43곳 운영…산림 기능 체험으로 심신 성장 이끌어

광주·전남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잇따라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고 있다.

유아숲 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시설이다. 어린이가 자연을 느끼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신체·정신적인 성장을 이끄는 효과가 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는 5개 구를 통틀어 총 15곳(동구 1개, 서구 3개, 남구 2개, 북구 2개, 광산구 4개),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고흥, 완도, 신안, 장성 제외 모든 시·군)에 유아숲 체험원 28곳이 조성됐다.

지난해 7월 조성된 광주시 동구 ‘데굴데굴 너릿재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들이 숲 산책로를 뛰어다니며 짚라인, 암벽오르기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인기다. 매주 1000여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매달 1500여명의 유아들이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역민의 꾸준한 요구와 필요에 의해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고흥군은 유아 체험시설 부재로 불편을 겪는 지역민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년까지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내년 4월부터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내 산지에 트리하우스, 친환경 놀이터 등 유아숲 체험원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심화하는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고자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광주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각각 0.87이며, 전남은 0.36으로 전국에서 가장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혔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내국인 상주인구 기준 만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로 고위험(0.2미만), 위험 진입(0.2~0.5미만), 소멸주의 (0.5~1.0미만), 보통(1.0~1.5미만), 낮음(1.5이상)의 5단계로 나눠진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주시 4개 자치구(북구 0.82, 서구 0.85, 동구 0.63, 남구 0.88)가 지방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고흥 0.1, 신안 0.11, 보성 0.12, 함평 0.13 등)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서현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아숲 체험원 등 친환경적 교육시설은 만 3~5세 유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며 “현대사회에서 유아숲 체험원을 통한 경험은 유아들의 전인발달 목표를 실현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커 양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다문화여성들의 손맛 광주시 북구 문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4일 오전 문화동자생단체협의회원들과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소외계층에 전달할 김장을 담그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강진·완도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 규명

## 진실화해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강진과 완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14일 제66차 회의를 열고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강진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2월까지 강진군 성전면과 옴천면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으로 지목되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성전면 월평리, 옴천면 개산리 등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는 비무장 민간인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10~50대 남성이었으며, 가해자는 강진경찰서와 각 지서 소속 경찰, 의용경찰 등이다.

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약산면, 노화읍, 소안면 등 3개 지역에 거주하던 8명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주민들이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완도경찰서와 지서 등지에 구금됐다가 완도군 인근 바다에서 집단으로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20대의 남성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완도경찰서 경찰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제적등본, 족보, 경찰기록,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경찰, 수능 특별 교통대책 수립

## 영어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광주·전남 경찰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광주·전남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

광주·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수능 당일인 16일 오전 6시부터 시험장 반경 2㎞ 이내 주요 혼잡교차로를 중심으로 경찰관·모범운전자 등 785명,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180대를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시험장 주변 차량 혼잡이 예상돼 200m 전방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지자체와 함께한다.

수험표 분실·미소지, 시험장 착오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 또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인접 순찰차로 시험장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수험생 편의도 제공한다.

광주 관내 수험생 태워주기 지정 장소는 광산(운남사거리·첨단우리은행사거리·광주송정역) 3곳, 동부(산수오거리·무등중사거리·남광주사거리·장동로터리) 4곳, 서부(서구청삼거리·화정사거리·풍금사거리·상무역사거리·광천사거리) 5곳 등이다.

남부(운진각사거리·백운광장·씨티병원) 3곳, 북부(일곡사거리·문화사거리·경신여고사거리·말바우사거리·운암사거리·유동사거리) 6곳 등에서도 운영된다.

경찰은 듣기평가 시간대 소음 예방을 위해 3교시(오후 1시 10분~1시 35분·25분간)에는 시험장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의 경적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알바생 비위로 폐업” 편의점, 임금체불 주장 나와

알바생의 연이은 비위 때문에 개업 1년만에 폐업을 한다는 전남대 후문 편의점〈11월 3일자 광주일보 6면〉과 관련 업주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폐업을 결정한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알바생 2명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업주 A씨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 편의점에서 2개월간 일했던 알바생 B씨는 첫 달 일한 3일분에 대한 15만원은 지급받았지만, 이후 2개월간 일했던 270여만원은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씨 역시 2달치 임금 170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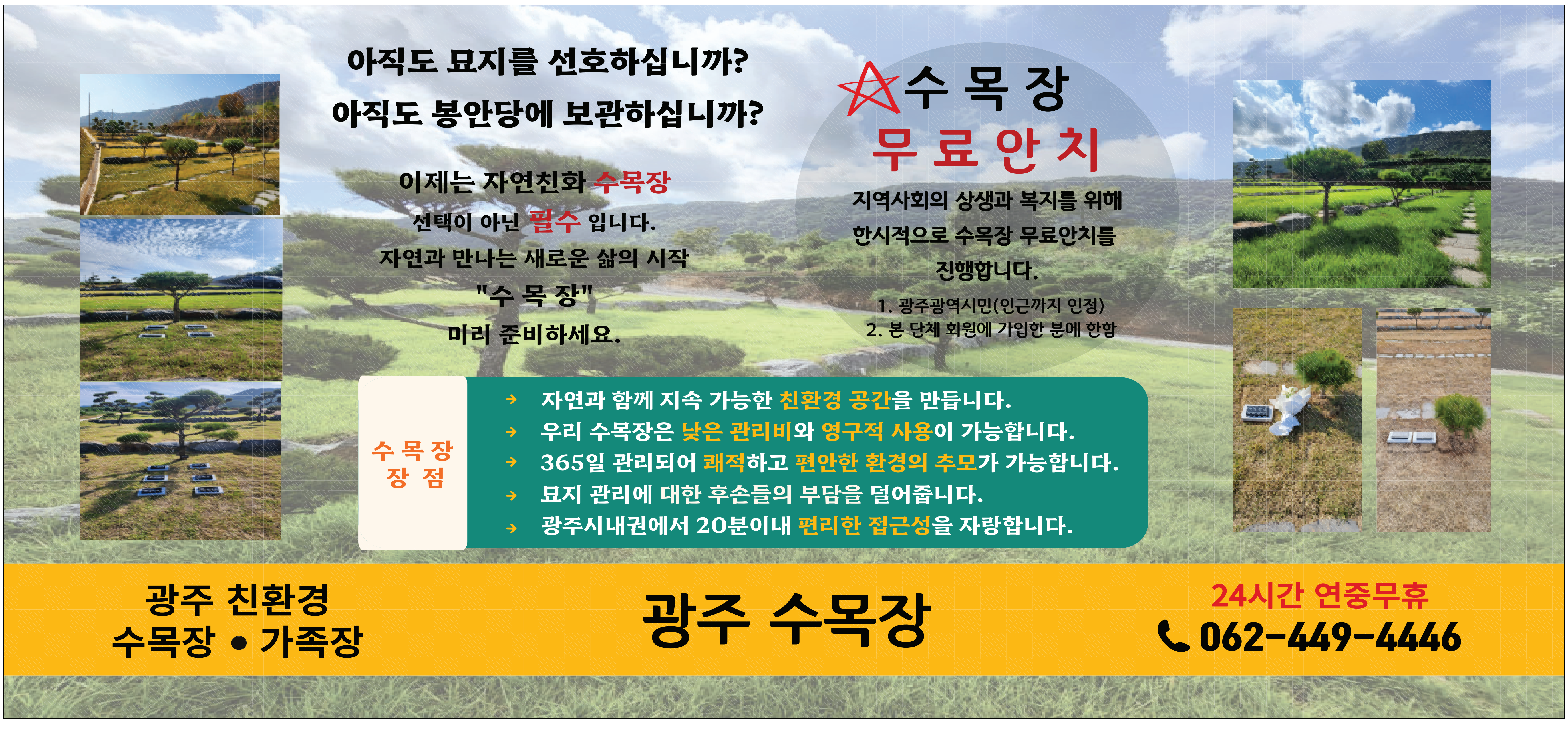
노동청은 A씨에게 2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알바생들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알바생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업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알바생들은 반박했다.

알바생들의 ‘무단외출’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휴게시간을 이용해 잠시 문을 닫고 집에 다녀왔던 것이고 쉬던 중 잠들어서 1시간 가량 늦었던 적은 있지만 이외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또 ‘절도’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물건을 훔치거나 집에 가져간 적이 없으며 단지 인수인계 당시 폐기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전달받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폐기음식을 먹었던 게 전부라는 것이다.

알바생들은 오히려 A씨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생들은 “A씨가 계속해서 절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하고 있다”며 “A씨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주는 “알바생들의 근무태만과 절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현재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것은 맞지만 알바생들의 절도, 횡령 등의 피해범위 내에서 정산이 완료된다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